

무안공항 다시 찾은 유가족 “책임은 어디 있나”

조류퇴치 시설 인력·장비 등 정상 운영 부실 도마
유족 동의 없는 잔해물·유류품 현장 정리 등 지적도

“비행기가 추락하고 탑승객이 죽었는데 조류퇴치를 제대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유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유족들은 국토교통부와 공항 측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다 결국 목소리를 높였고, 현장 브리핑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조류퇴치 시설과 사고 지점인 로컬라이저 (항행안전시설) 주변을 차례로 둘러봤다.

그러나 현장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토부와 공항 관계자가 조류탐지 장비와 현재의 퇴치 체계를 설명하자 유족들은 “사고와 무관한 이야기만 한다”, “당시 상황부터 설명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설

명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며 오열했고, “제대로 했다면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느냐”고 울부짖었다.

특히 사고 당시 조류퇴치 인력이 1명뿐이었다는 설명이 나오자 현장은 더욱 격앙됐다.

공항 측이 “정원은 4명이었지만 당시 근무자는 1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유족들은 “정원만 있고 실제 운영은 붕괴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성능 확성기와 업층, 폭음기 등 장비가 있었다는 설명에도 “그때 작동했는지 중요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앞에 도착하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유족들은 “특위가 오기 전 자체 잔해와 유류품이 유족 동의 없이 치워졌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누구 허락을 받고 현장을 바꿨느냐”, “진상 규명도 끝까지 않았는데 증거를 정리해도 되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잔해 보관 장소에서 설명하겠다”는 답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변만 반복했고,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주변을 직접 둘러 남아 있는 잔해와 유류품을 확인했다. 일부 유족은 불에 탄 기체 조각을 발견하고 말을 잊지 못했다. 사고 잔해 보관소에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1년 넘게 야외에 방치된 잔해들이 방수포에 덮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자 유족들은 “초기에는 방수조치조차 없었다”며 책임을 따졌다.

결국 브리핑 도중 한 유족이 격분해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밀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현장 설명은 중단되기

도 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둔덕 주변에는 분명히 가족들의 유류품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말끔히 사라졌다”며 “수사도, 책임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 바뀐 것은 또 다른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은 지난 1년간의 은폐와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유족들이 묻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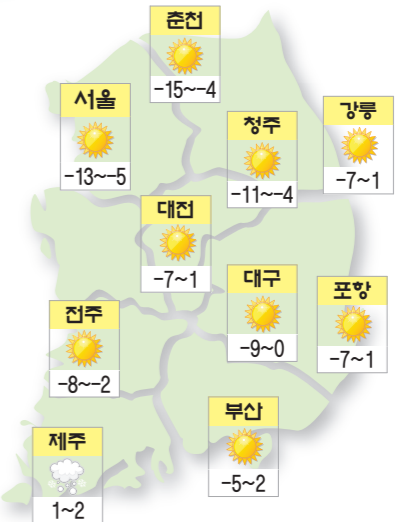
것은 단순하다. 누가, 언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라며 국토부와 공항 측에 당시 인력 운영 실태와 시설 관리, 잔해물 정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양수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은 “조류 관리와 시설 운영, 현장 보존 전반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력 배치와 잔해 처리 과정 등 핵심 쟁점을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39 맑음 09:08
예보 17:49 맑음 20:15



광주		-6~-1
목포		-5~-2
여수		-6~-1
순천		-8~-1
구례		-9~-2
광주		-5~-1
진남		-4~0
진남		-2~0
진남		-6~-1
진남		-4~-1

목포	밀물 (고)	03:26 / 16:09
	썰물 (저)	08:50 / 21:25
여수	밀물 (고)	10:56 / 22:59
	썰물 (저)	04:20 / 16:59

택시 뺏고 기사 때린 공무원

만년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0분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서 순천시 공무원 A과장(5급)을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

A과장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한 후 기사를 폭행한 혐의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돌연 택시를 몰고 2km가량을 운전하고 가다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과장을 체포

A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업주 협박공갈한 일당 처벌

‘미성년자 주류제공’ 악용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일당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의 B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 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업주로부터 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다른 주점 업주에게도 9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달 27일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도 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파에 움츠린 시민들 광주·전남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0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을 맞아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서해안 지역에 3~10cm. 광주와 전남 중부 지역에 1~5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교육청, 초등학생 6만7260명 학급 배정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 6만7260명에 대한 공립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완료했다.

20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공립초는 151개 학교로 학급 수는 3678학급이다. 지난해보다 95학급이 줄었다.

학급별로는 일반학급 3489학급, 특수학급 177학급, 다문화학생 밀집초는 한국어학급 12학급이 설치됐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0.6명 감소한 19.3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년별로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의 배정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인 하남중앙초, 대반초, 월곡초는 1~6학년 전체 20명, 영천초, 어등초는 1~4학년 20.4명, 5~6학년 22명 등 학급 기준을 완화해 배정했다.

이 밖에 하남중앙초 3학급, 대반초 4학급, 월곡초 3학급, 영천초 1학급, 어등초 1학급의 한국어 학급을 별도 배정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12·29 여객기 참사 초동대응 ‘공백’ 드러나

관제탑, 소방차 출동 지령 등 미전달…대기만 요청

국조특위 “지휘 주체·통신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179명이 숨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제탑이 공항 소방대에 명확한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확인됐다.

국조특위는 ‘비상 상황이 사전에 공유됐음에도 초동 대응이 지연된 배경에 지휘·통신 체계의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관제실과 종합상황실, 활주로 등 사고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양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18명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항 종합상황실과 시설부, 소방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제탑으로부터 소방차 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

시나 지령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공항 측 시간대별 조치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 관제탑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비상 착륙 가능성을 소방 상황실에 알리며 ‘출동 대기’를 요청했을 뿐, 실제 출동 명령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오전 9시 2분 34초 소방대 출동 알람이 이뤄졌고, 불과 23초 뒤인 오전 9시 2분 57초 항공기는 활주로 밖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으며 폭발했다. 소방차는 오전 9시 5분께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항 종합상황실장은 “소방차는 출동 명령이 있어야 이동한다”며 “관제탑에서 대기 요청은 있었지만 출동 여부는 소방에 문의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상황실은 소방 출동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부장 역시 “메이데이(비상) 상황은 공유됐지만 대기 외 별도의 지시·지령은 없었다”고 답했다.

소방대장은 출동 경위에 대해 “벨이 울리는 동시에 출동했다”면서도 “출동 알람이 관제탑에서 나온 것인지, 소방상황실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다만 “소방 쪽에서는 분명히 벨을 눌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들은 “비상 착륙 가능성이 사전에 공유됐는데도 폭발 이후에야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진 것 아니냐”, “출동 판단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종합상황실 측은 “소방 출동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조특위는 향후 관제탑과 소방, 종합상황실 간 통신 기록과 출동 로그, 매뉴얼 등을 토대로 관제 지시 여부와 초동 대응 지연 원인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송정역 ‘호남 대표 관문’ 재탄생 프로젝트

광장 확장·체류형 공간 조성…역목 교통 구조 개선 기대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호남 대표 관문 위상에 걸맞은 거점역으로 조성하고자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속열차(KTX) 등을 이용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후 여인숙 등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역 광장 면적은 약 1만3120㎡로 늘어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의 승·하차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상업적인 교통 혼잡 문제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및 영입 보상비와 철거·조성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산구는 역 광장이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관문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광장과 외부 공간이 협소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루 이용객은 KTX 개통 전인 2015년 3327명에서 최근 2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2030년이면 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면적을 5755㎡에서 1만799㎡로 늘리고 낡은 대합실·승강장·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송정



광주송정역광장 조감도.

역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장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송정역 광장은 동대구역(2만 5638㎡)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송정역 택시승강장은 16면, 버스승강장은 2면에 그쳐 대중교통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대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 혼잡도 심각하다. 동대구역의 경우 택시승강장 130면, 버스승강장 8면을 갖춰 각각 8배, 4배 규모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